데스크 시각

1970년 남영호, 그 후 44년…

송 기 동
사회2부장

"308명의 생령을 삼켜버린 바다는 얼어붙은 한밤을 꼬박 새운 한·일 합동의 필사적인 구조작업에도 물에 뜬 밀감상자 외에는 흔적을 찾을 길 없다.…"

1970년 12월 17일자 전남일보(광주일보의 전신) 사회면 르포기사의 일부분이다. 14일 오후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362t급)가 15일 새벽 1시 20분께 여수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다. 통신사는 침몰 전 긴급 구조신호(SOS)를 타전한다. 뒤늦게 해군과 해경이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를 밝히며 구조작업을 진행했지만 생존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승선자 숫자가 초기 246명에서 320명→334명→338명으로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사망자 수 역시 240명→308명으로 유동적이었다가 32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승객과 화물을 규정이상으로 무리하게 실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승객 정원(300명)을 초과한데다 연말연시 밀감 성수기를 맞아 밀감 7300여 상자를 갑판에까지 쌓는 바람에 왼쪽으로 15도 가량 기운 채 출항을 했던 것이다. 출항 전 항구에서 이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건국 이래 최악의 해난사고

또 을종 2등 항해사가 아닌 병종 1등 항해사가 임시 선장을 맡는 등 통신사·기관장·갑판장·사무장 등 승무원 7명 모두 규정에 미달한 무자격자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경과 무선국, 해운 당국 등 관련 행정기관들의 태만도 사고를 더욱 키웠다.

해운당국은 15일 오전 7시 입항할 예정이던 남영호가 들어 오지 않는데도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연락을 받고서야 허둥댔다. 수산청 산하 어업무선국 당직자는 침몰하는 남영호의 SOS 신호를 받고서 위치와 선박명을 알려달라는 답신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묵살을 해버렸다.

사고 이후 선주와 선장, 선원은 물론 서귀포·성산포항 임검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줄줄이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로부터 44년의 시간이 흐른 2014년 4월,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 세월호(6825t급)가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했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만해도 구난장비를 잘 갖춘 여객선인데다 낮 시간이어서 탈출과 구조에 전혀 애로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선장과 승무원은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망각한 채 배를 버렸다. 그들의 과오는 직무유기이자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세월호'는 건조된 지 20여 년이 된 여객선에 승객과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태우고 실은데다 급격한 변침으로 인해 적재한 차량과 컨테이너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 중심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원 초과·과적 '닮은 꼴'

'세월호' 사고 원인 역시 승선인원 초과와 과적 등 '남영호'와 너무나 닮은 꼴여서 놀랍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44년의 세월 동안 '관행'으로 넘겨왔던 한 가지, 한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며 결국 곪아 터지고 말았다. 어른들의 잘못이 못다 핀 꽃 같은 학생들에게 전가됐다. 누렇게 변색한 1970년 신문을 하루, 하루 넘기며 봤던 상황이 다시 '세월호' 사고에서 복기(復棋)되고 있는 격이다.

'안전'을 내세워 '행정안전부'를 굳이 '안전행정부'로 간판을 바꿔 단 행정당국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며 질타를 받고 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다시는 이러한 해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해운업계 등이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고 8일째인 오늘도 온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진도 구조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아시아 문화전당 서쪽 벽에 붙은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하나, 하나 읽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기억할게. 너희들의 목소리를, 눈물을… 사랑한다."

"너희의 시간이 멈추지 않길 꼭 다시 만나길. 기다릴게."

"꼭 단 한 명이라도!! 너무 귀하고 예쁜 아이들. 마음에 잊지 않을게."

"못다 핀 꽃들아. 활짝 핀 너네들이 보고 싶구나."

한마음으로 '기적'을 바란다.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5·18 왜곡과 임을 위한 행진곡

강 대 석
남도향토문학연구원장 행정학박사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대중들은 한 번 들으면 믿지 않고, 두 번 들으면 의심하고, 세 번 들으면 완전히 믿게 된다."면서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엊그제 어느 지인이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확인하던 중에 '5·18 북한군 개입 동영상'이라는 파일이 다른 파일과 함께 있어 열어 보았다. 거기에는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이 줄곧 주장하는 '5·18때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 명이 개입하여 지휘부를 구성하고 무기고와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내용과, 지난해 종편 TV방송에 인민군 출신 탈북자라며 출연하여 '5·18때 북한군 1개 대대가 개입하였다' 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편집돼 들어있었다. 누군가 이 동영상을 전파시키기 위해 다른 자료에 교묘히 첨부하여 보낸 것을 보니 진화된 수법이 놀라웠다.

문득 지만원에 대해서 궁금했다. 검색을 하니 '지만원 시스템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다. 들어가 보니 5·18 진실왜곡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곡이라는 등 도저히 그냥 볼 수 없는 글들로 가득했다.

지만원은 5·18 왜곡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자기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판결문에는 무죄의 주요 이유를 '(지만원의 글은) 집단표시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되지만 이 행위는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5·18 피해자수가 4000명에 이르러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여길 정도로 피해자 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글이 5·18유공자를 비난하는데 있다고 보기보다는 피고인(지만원)의 관점에서 5·18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에서 5·18유공자 개개인의 명예훼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의 요지였다. 즉 그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 준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법원 판결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자기의 주장이 진실이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와 5·18 관련단체 등에서는 지만원씨 외에도 전사모(전두환을 사모하는 모임)와 TV출연 인민군출신 탈북자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려진 법원판결 역시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여 지지만 5·18 관련자 비방은 없었다.'거나 '5·18 민주화유공자가 4000명이 넘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런 게시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5·18관련 판결들이 지만원씨의 무죄 판결과 비슷한 논리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보훈처의 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사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판단이 5·18에 대한 왜곡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 막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진실을 왜곡한 주장들이 한 두 사람의 망언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호남비하로 이어져 호남이 마치 용공, 종북의 진원지처럼 비화되고 나아가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주로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의 어린 학생들이 이런 글들을 보면서 5·18과 호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될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5·18은 80년 신군부의 무력진압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자구적 저항운동으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60만 광주시민과 많은 국내외 보도진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광주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5·18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애국을 가장하여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또 다른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결코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또 5·18이 다가온다. 5·18을 지키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호남인만이 아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볼 때, 정부에서도 5·18 왜곡 방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교사의 권위

이 동 범
전 광주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지난달 광주일보에 게재된 "광주에서 고교 교사가 교장 폭행 물의"라는 기사를 보고 교육현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인즉 회식 뒤 학교운영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술김에 몸싸움으로 번져 말리던 여교사는 중상을 입었는데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나 학부모, 시민들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이 필수조건인 것이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할진데,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열과 성의는 최선의 교육내용이자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사론의 핵심인 것이다. 이 시대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인격적 모범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보고 과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선생님들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의 교육철학자인 피터즈에 따르면 교사는 직위상의 권위와 전문지식의 권위, 전문가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직위상의 권위는 국가에 의해 교원자격을 갖고 교사의 직위에 있는 교사에게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권위를 가리킨다. 전문지식의 권위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에 정통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인정받게 되는 권위다. 그리고 전문가적 권위는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교육방법을 동원해 잘 가르칠 때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권위이다. 여기에 도덕적 권위를 추가할 수 있다. 도덕적 권위는 교사가 교직생활에 헌신하며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때 인정받는다.

훌륭한 교사라고 칭송받는 교사가 갖는 권위는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직위상의 권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세 가지 권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교권을 세워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권위는 직위상의 권위뿐이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의 권위나 전문가적 권위, 도덕적 권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도적으로 세워질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생님들 자신의 끊임없는 연찬(硏鑽)과 헌신적인 교직생활의 결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사랑의 회초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교사들의 권위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원 예우 규정을 만들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이전보다 더 존경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주자는 다짐도 필요하고 외침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는다.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직위상의 권위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교과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새로운 교수법을 터득하고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점검해 보자. 그리고 학생들의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몇 번의 대화를 했는지 헤아려 보자.

학생이 배운 것을 모르겠다고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고민을 털어 놓을 때 시간을 내서 경청하였는지 반성해 보자.

선생님들은 교사의 본분인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더 강하게 갖고 스스로 권위가 설 수 있도록 교권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이 번 광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의 교장 폭행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사의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도록 당부드린다.

社 說

기본과 원칙 없는 사회가 대형참사 불러

세월호 대참사가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전 국민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다.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과 일부 승무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사고 수습, 해경의 초기 대응 난맥상을 비롯한 허술한 위기관리 매뉴얼, 선사(船社)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일부 공직자와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안전불감증과 돈이면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회 인식은 고질화된 지 오래다. 안전시스템 또한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 정부는 참사가 터질 때마다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다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말 뿐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권에선 기존의 위기관리 시스템마저 무시해버렸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70년 남영호 침몰과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겪고도 이번에 다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됐으니 개탄스럽고 분노마저 치민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대형 인명사고를 낸 경주 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일어나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구호가 허언임을 드러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후진국 형 대참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허둥대는 당국,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억장이 무너진다. 언제까지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달고 살아야 하는가. 가장 기본인 안전마저 부실하게 이뤄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제2 세월호 참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 배 안에 갇힌 채 숨져간 어린 학생들과 함께 숨이 막히며, 절망해 가는 비통함을 겪고 있다. 기본과 원칙이 무너져 아픔이 반복되는 이 현실, 이 나라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불상사 얼룩진 수학여행 전면 개선해야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올 1학기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중지됐다. 사전에 일정이 잡혀 있다 해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학여행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애초 수학여행은 학교 공부에 찌든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휴식을 주고 아울러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수백 명이 한꺼번에 3~4일 동안 같은 장소로 이동해 진행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잠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사가 아니라 실제 배움의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광주 상일여고의 경우 수년 전부터 8개의 테마별 코스 수학여행을 실시해 학생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줌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성덕고 역시 선호도 조사를 통한 권역별 수학여행으로 교육목적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서는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안전사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사전에 여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여행사나 방문할 자치단체의 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갖춤으로써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학여행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중단시켰지만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인 여행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생생한 배움의 기회로 삼고, 안전하고 유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2학기에 수학여행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어 숙소나 방문지 혼잡이 예견되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미리 권역별 분산 등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사명(使命)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무언가 완수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운명지어진 목표나 사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랜 수행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처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비원을 세운 것은 6년간의 고행과 보리수 아래 목숨을 건 15일간의 단식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서였다. 예수도 40일간의 광야 고행과 겟세마네의 기도를 거치고 나서야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한다는 소명을 얻었다.

신화에 나오는 북유럽 최고의 신 오딘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아홉 밤 아홉 낮을 명상하고 나서야 우주에 대한 지혜를 얻었고, 고대 제사장들도 환각물질의 도움을 얻어 '초월의 세계'를 다녀온 뒤에야 비로소 종교 지도자이자 의사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허락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요즘 세상에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소명을 밝히려 하기보다는, 성현과 선인들이 찾아낸 '소명'을 훔치거나 베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엔 '138억여 년 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대폭발(Big Bang)이 일어나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겼다'는 우주 팽창론(cosmic inflation)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절대자의 개입'이 필수적인 소명이나 사명, 운명이라는 단어는 존재감마저 희미해 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뜻밖에도,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진 세월호의 선실과 90도로 기울어진 갑판에서는 흐릿해져 가던 이들 단어가 과거의 찬란한 빛을 되찾았다. 죽음의 공포에 가위눌린 어린 학생 대신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진 교사와 일부 승무원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뛰쳐나오려는 생존본능을 '먼저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진정시켰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고통과 좌절감에 휩싸여 힘겨워하고 있다. 먼저 간 의인(義人)들이 어린 생명을 구해내는 사명을 완수한 것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의 사명일 것이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